

2004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안 세 경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경제의 패러다임 중심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제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는 시대흐름에 따라 ‘지식’이 개인, 기업, 지역, 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부창출의 시각이 비교우위적 사고에서 경쟁우위적 사고로 전환되어 국가의 부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식활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부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경제운영체제는 과거 국가중심의 수직적 경영체제에서 민간주도의 제휴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지식중심의 비교우위적 사고능력을 가진 지역의 자생적 능력 배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전략과 산업구조는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발전의 거시적 지표인 각종 국가발전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지역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지역차원의 자생적 역할을 제시하여 분권과 자율, 국가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중앙과 지방의 공존공영의 상생전략(Win-Win Strategy)으로서의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

1. 국가의 전략산업추진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식집약도가 높은 전자, 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산업, 환경산업 등을 중점육

성하고 있으며 지식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지식투입결과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등 국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도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간망 구축, 모바일화 등으로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 건설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확대, 코스트 절감, 기업유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 국가발전정책의 기초 전환

국가발전정책의 기초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발전정책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이념으로 분권과 자율이 확대·정착되어 지방이 창의성을 적극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경제적 능력성에서 벗어나 지방성장거점도시 및 농촌 거점중심지 개발에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발전하는 동시에 지방에 대해서는 지방주도적 계획에 따라 정부가 핵심 성장역량을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3. 세계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

세계경제는 주도지역의 다변화로 대변되는 국제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가간 FTA협상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FTA 체결을 필두로 수개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등 남북교류를 적극 활성화할 경우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여 앞서 갈 수 있는 선점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III. 지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IMF관리 위기이후 지역경제는 지역별 경제회복의 차이 발생으로 산업생산활동이 IMF시기 이전보다 활발한 지역과 위축된 지역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간 격차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인구('60년 20.8% ⇒ '80년 35.5% ⇒ '00년 46.3%) 경제력('80년 35.7% ⇒ '00년 44.6%)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정부 및 민간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련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도권 지역은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경제기반의 취약과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면에서도 지원주체별 부분적·산발적 분산지원에 따른 중복투자로 시너지효과가 미비한 결과를 낳았고 인재, 기술, 정보 등 소프트 인프라의 취약성을 띠게 되었다.

지역경제정책 수행주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경제행정기능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경제관련 업무중 기획, 조정 및 지원기능은 미약하고, 중앙과 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2004년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1. 기본방향

2004년도 지역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 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을 추구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지방스스로의 '자립형지방화' 실현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다양성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중앙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활성화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창의성은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경제정책 방향설정의 기본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지역경제정책 추진전략

2004년도 지역경제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차원의 장단기 추진전략에 대응하는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차원의 자주적인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별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의 집중육성 및 산업집적의 활성화 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 추진시책 보완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정책과제를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지역발전정책지원의 강화이다.

지방재원을 효율성이 검증된 계획에 중점 지원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모델을 개발하고 지방상공회의소의 시군단위 설치를 확대하고 조사연구기능의 시군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동시에 시도출연연구기관의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연구조사기능을 확대하여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분권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한 등을 완화하고 지방의 의견을 법령제·개정시 적극 반영하여 상생의 전략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3.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1) 거점별 성장 인프라 조성 확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는 먼저 거점별 성장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체계를 개선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간 횡적 연결 등으로 지방의 교통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지방의 입지여건, 발전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중소도시의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 및 농어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종합화, 통합화로 지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 확충 및 전국연계망을 구축하고 비수도권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도로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도시 권역, 중규모 도시 및 소규모 낙후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개발체계를 정비하여 특성화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을 국토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에 반영 추진하여 산업별 수도는 광역권 계획, 전문중소도시는 특정지역제도, 낙후지역개발을 개발촉진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자체별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그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낙후지역 이전업체에 「지역사업균형발전 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오지·도서낙후지역 개발, 소도읍, 접경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집적의 활성화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는 권역별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산단 입지조건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실효성이 극대화되리라 본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비수도권 전략산업유치 등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각종 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혁신기관 및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기술·인력·생산·물류 및 유통이 결합된 「맞춤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 및 기술산업화 기반구축, 지자체간 경쟁원리 도입 등을 통해 권역별 특화전략(산업진흥) 사업을 지속육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문화·S/W·해양신산업 등 산업별로 특성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권역별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진흥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진흥도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한 중요한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문화와 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쟁력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휴식, 위락, 스포츠 등 다양한 관광 레저공간을 개발하고 국제관광지역 개발, DMZ 국제평화생태공원의 조성 등의 「문화산업단지」 조성방식의 「문화산업지구」 개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다수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지역간 공동 관광·문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관광벨트」를 구축하거나 지역특성에 입각한 다양한 문화·관광권 지정개발과 세계적인 전본시와 테마파크를 결합한 지방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4) 지방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 인프라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간망으로서 지역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용한 수단이 된다.

이에 대한 인프라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의 추진, 공동물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역산업 물류 지원 등의 지방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와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기간물류거점을 구축하여 거점지역별 물류인프라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물류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고, 개별화물정보망과 통관·무역 등 유관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완성하는 등 지

방별 특성화를 살린 물류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5)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권역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은 국가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세계 우수기업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중점개발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의 핵심은 국제거점시설의 확충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근간으로하여 지방도시를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하고,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제 회의유치 및 회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자유무역지역조성, 국제자유도시지정 등을 통한 원활한 외국인 활동 공간 확보는 물론 외국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등 S/W 획기적 정비를 포괄한다.

또한 지역단위 e-business센터, 센텀시티, 오도벨리, 대덕벨리,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관광단지 등 단위별 세계적 특화센터 구축 등 동북아 IT첨단 산업 중심지화를 위한 기반시설정비를 통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협동화 생산단지, 하이테크 빌리지 조성, 천안벨리조성, 바이오 기업지원센터, 지역기술혁신시스템 등 첨단연구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 지역간 고유산업을 IT벤처기업과 접목으로 자생적 성장기반구축을 위한

위한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성장인프라 구축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을 병행 유도해 나갈 수 있다.

V. 맺 음 말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완화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온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낙후지역, 농어촌개발, 지방도로정비 등의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즉 IT, BT등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지방재래시장 기반정비사업으로 지방영세상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지방 일자리제공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기조 유지를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수도권기업지방이전시 공유재산수익계약허용), 낙후지역환경정비 및 정주여건개선사업 추진, 접경지역지원법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통한

접경지역과 소도읍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 지역 향토자원의 육성개발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참여정부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종래보다 훨씬 강하게 발휘되는 시대의 지역발전을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전적 기회균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도 이러한 기초아래 각기 지역의 특색에 입각하여 발전의 기회가 사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구성원의 자아실현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개인과 지역의 잠재력 발휘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경쟁과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은 지역 내부의 지속적인 자치능력강화와 문제해결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과 각종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의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